



- 주소 : 인천 중구 운서동 IBC 월드게이트 2층 비즈니스센터(인천공항지역지부)
- 전화 : 032-743-0053 •전송 : 032-743-0054 •대표이메일 : kptu007@hanmail.com
- 날짜 : 2026년 06월 18일(수) •담당 : 문설희 정책기획국장 (kptu1218@gmail.com 010-8779-0227)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담당기자 •첨부자료 : 공공운수노조 성명서 •총 : 3쪽

## 모두의 인천공항, 안전한 일터를 위해 ‘제대로 된 원청교섭’ 투쟁은 계속됩니다!

‘원청교섭 게리맨더링’ 시도한 인천공항공사 손들어 준 노동위원회 결정 유감.  
공항공사 방해에도 ‘제대로 된 원청교섭’ 투쟁으로 안전한 일터 향해 나아갈 것.

1. 정론보도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개정 노조법(‘노란 봉투법’) 시행 100일인 6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어제 심판회의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유지를 통보하였는데, 인천공항 현실과 동떨어진 초심을 바로잡지 않은 결정은 “하청 노조의 교섭력 약화를 노리며 ‘원청교섭 게리맨더링’을 시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명 전문 별첨자료 참조)

3. 지난 3월 10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정안석)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공항공사는 교섭 응낙 대신 이례적으로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를 선제적으로 신청했다.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와 관계없이 공동교섭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고, 인천공항 3개 자회사의 사업 부문별 4개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을 진행해왔던 교섭 관행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공항공사가 상급단체별 분리를 선제적으로 신청한 이유는 원청교섭에서 이와 같은 연대와 질서를 끊어내 자회사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 명백했다.

4. 안전한 공항 안전한 일터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투쟁해 온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라는 지난 4월의 초심 결정에 불복, 5월 18일 재심을 청구하고 ‘제대로 된 원청교섭’을 위한 판단을 요청했으나, 6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유감스럽게도

초심 결정을 바로잡지 않았다. “초심에서 중구난방으로 적용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의 문제점이 분명한데도 이를 방기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아쉽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재심 결정서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기대에 매우 못 미치는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라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민현기 노무사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5. 사용자성 회피용 노무법인 컨설팅, 하청 노조 교섭력 약화를 목표로 한 ‘원청교섭 거리 맨더링’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꼼수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원청교섭 방해 시도에도 안전한 공항·안전한 일터를 향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안석 지부장은 “지노위 결정에 따른 창구 단일화 절차는 마쳤다. 원청교섭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었다. 다음 주 24일(수) 1차 교섭을 열 것을 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생명안전 위협하는 연속야간노동 근절 및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6.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뿐이라며 사용자성 회피 및 교섭의제 협소화를 위한 주장을 초심과 재심에서 반복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특정 노조에 지속적으로 수십억 원의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항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아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재난 피해 위험을 방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공항공사의 내로남불식 법의식과 이중잣대가 원청교섭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 부처는 마땅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7.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한계는 명확하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원청교섭에 최선을 다하며,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격차축소를 심화시키며 죽음의 공항을 방지하려는 행태에 맞서 ‘모두의 인천공항, 안전한 일터’를 향해 끈질기게 나아갈 것이다. (끝)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방해에도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원청교섭 투쟁은 계속된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3월 10일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공사는 교섭 응낙 대신 이례적으로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를 선제적으로 신청했다.

인천공항에서는 21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와 관계없이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함께 교섭연대를 구성해 투쟁해왔다. 교섭관행 측면에서도 인천공항 자회사는 사업 부문별로 4개 자회사로 구성되어 사업 부문별 자회사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런 배경에도 공사가 상급단체별 분리를 선제적으로 신청한 이유는 원청교섭에서 이와 같은 연대를 끊어내 하청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다. 일종의 '원청교섭 게리맨더링'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노조법 시행 100일인 오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같은 중노위의 결정은 유감스럽다.

다만 이번 심문회의에서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원청교섭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은 더욱 명징해졌다. 심문회의 과정에서 공사는 자회사 사측이 공사에 교대제 개편 관련 협의 요청이 부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원청과 협의 없이는 교대제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던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로, 교대제 개편 의제가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의제임을 방증한다.

공사의 이와 같은 원청교섭 방해 시도에도 공공운수노조와 인천공항지역지부의 공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미 창구단일화 절차 등을 마치고 원청교섭에 돌입할 모든 체계를 갖추었다. 4조 2교대 개편 등 공항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인천공항지역지부와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6월 1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